

교육을 현행 27시간에서 45시간 이상으로 늘렸다.

연극 교육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초등학교 5~6학년 국어에서는 연극 대단원이 개설되고 중학교 국어에는 연극 소단원이 신설된다. 고등학교에서는 보통교과의 일반선택 과목에 '연극'이 새로 포함된다.

교육정책

■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

2013년 9월부터 전국 중학교 42곳에서 시범 운영돼 온 자유학기제가 2015년에는 전체 중학교의 70%(약 2천230곳)로 확대, 운영됐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의 한 학기를 시험 부담 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 진로탐색 기회로 삼게 하는 제도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이다.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해당 학기 동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없앴다. 대신 학생 스스로 점검하는 자기성찰 평가, 교사가 수업과정 중 평가하는 형성평가 등을 시행한다. 학생들의 진로탐색 활동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서술형으로 기재한다.

교과별 수업시수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기본교과는 핵심 성취기준 중심으로 충실히 가르치되 토론과 실험, 실습, 현장체험, 프로젝트 학습 등 자율과정을 강화한다.

또 학기에 2회 이상 동일체험활동을 실시하고 학생이 진로 체험을 계획하면 학교가 출석으로 인정하는 자기주도 진로 체험도 학교장 재량으로 시행한다. 예체능과 기본교과를 융합한 수업, 교사 여럿이 가르치는 공동수업, 수업시간을 두세 시간씩 묶는 수업, 진로캠프, 사회인사 특강 등도 진행할 수 있다.



▲ 9월 1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수곡중 1학년 학생들이 청주지법이 마련한 자유 학기제 법원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섰다.

교육부가 2015년 11월 확정 발표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계획에 따르면 자유학기 활동은 170시간(주당 10시간) 이상 편성하고 지필 시험 방식의 평가를 시행하지 않으며, 자유학기 기간에 2회 이상 진로체험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위해 학교당 평균 2천만 원 내외의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자유학기제 강사 초빙과 현장학습 지원 등의 비용으로 사용된다.

또 전국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험 활동을 위해 11월 기준으로 전국 7만8천993개 체험장의 16만3천613개 프로그램을 확보한 상태다. 공공·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험처를 확보하고 프로그램 질·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산·어촌 중학교들의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공공·민간이 제공하는 양질의 진로체험 지원 프로그램을 이들 지역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양질의 프로그램이 부족한 농·산·어촌 학생들을 위해 '진로체험버스' 대상 학교를 368개교에서 2016년 1천28개교로 늘리고,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3~2015년 자유학기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 학생의 자기표현력, 학교 구성원 간 친밀도 등이 높아져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인성교육 강화

2014년 12월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의 후속으로 교육부는 2015년에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잇따라 제정했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17년부터 교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은 인성관련 과목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시행규칙은 교대와 사범대가 교직과목, 교양, 전공 중 한 분야에서 인성교육에 관한 과목을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은 2017학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편입생, 재입학생은 2019학년부터 적용된다.

또 교육부가 인성교육종합계획 수립 지원, 인성교육 실태조사,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하는 인성교육진흥센터를 지정하도록 했다.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은 새로 개발된 것으로 한정했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은 교원연수기관이 15시간 이상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할 경우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과목을 총 이수시간의 10% 이상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종합계획의 달성 정도를 평가한 뒤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은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당시 참사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생명 경시·물질 만능·이기주의 등의 풍조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자성을 바탕으로 2014년 5월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성교육을 법으로 의무화한 것이다.

제정안은 그해 12월 29일 재석의원 199명 전원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2015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 이어 구체적인 시행 내용을 담은 인성교육진흥법 5개년 계획(2016~2020)도 수립했다.

■ 진로교육법 제정

초·중·고등학교가 특정 시기에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학교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진로체험을 다양화하는 지원사항과 제도를 규정한 진로교육법 제정안이 2015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제정안은 교육감이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에 전국 중학교에 도입되는 자유학기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제정안은 학생의 발달 단계와 소질,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기회 제공을 의무화했다.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전문전담교사 및 전문인력 배치, 진로심리검사와 진로상담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제정안에는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운영과 지역사회 참여, 진로교육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진로교육법과 더불어 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각 급 학교에는 진로전담교사가 1명 이상 배치된다. 초등학교에서는 보직교사가 진로전담교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진로·진학상담 과목 교사가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진로전담교사는 해당 교육이나 연수를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진로교육법 제정을 통해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로교육과 취업지도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공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확정

교육부는 2015년 10월 영어 절대평가의 세부적 도입 방안을 포함한 ‘2018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현행 상대평가에서는 성적표에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제공되지만,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등급만 표기된다.

영어 만점은 현재와 같이 100점이고 등급 간 점수 차이는 10점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원점수가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고 80~89점은 2등급, 70~79점은 3등급, 60~69점은 4등급이다. 현행처럼

문항 수는 45개이고 1개 문항 당 배점은 2점이나 3점이 될 전망이다. 영어 절대평가에서 틀린 문항이 4개 이하가 돼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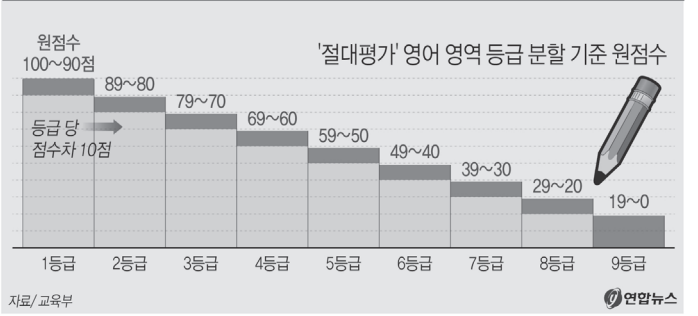
앞서 교육부는 2014년 12월 수능에서 영어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확정하고 정책연구를 진행, 고교 현장, 대학입학 관계자, 영어 및 평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부는 절대평가 등급 개수로 9개 또는 4~5개 중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생 간 차이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고 기존 수능 점수체제와 조화도가 높은 9등급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절대평가 등급을 4~5개로 결정하면 변별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능의 영역별 등급은 9개이고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필수과목인 한국사도 9등급제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영어 절대평가 방식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절대평가 도입으로 학생들은 다른 응시자와 무관하게 본인의 원점수에 따라 정해진 등급만 부여받는다”며 “점수 1~2점을 더 받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수능에서 영어도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은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

영역(과목)	구분	문항수	배점	평가 방식	성적 표기	
국어	공통	45문항	100점	상대평가	표준점수·백분위·등급 동일 제공	
수학	문·이과 구분	나/가형 30문항	100점	상대평가	"	
✓ 영어	공통	45문항 (듣기 17문항)	100점	절대평가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 제공	
✓ 한국사	필수	20문항	50점	절대평가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 제공	
탐구영역	사회	선택영역 9과목 중 택2	과목당 20문항	50점	상대평가	표준점수·백분위·등급 동일 제공
	과학	8과목 중 택2	20문항	50점	상대평가	"
	직업	10과목 중 택2	20문항	50점	상대평가	"
제2외국어, 한문	선택과목 택1	30문항	50점	상대평가	"	



겠다는 '쉬운 기초'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또 학교의 영어 수업이 문제풀이에서 벗어나므로 학생들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균형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는 2014년 12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오는 2017년까지 1단계로 4만 명이 감축되는 등 2023년까지 총 16만 명의 입학정원을 줄이는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 기본계획에 의거해 교육부가 평가를 실시한 결과 4년제 일반대학 32개교, 전문대학 34개교가 국가 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재정지원에서 제한을 받게 됐다. 이는 평가에 참여한 일반대 163개의 19.6%이고 전문대의 경우 135개교의 25.2%이다.

교육부가 일반대, 전문대, 산업대 등 298개교를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해 2015년 8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총점(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대학들은 그룹 I(A·B·C 등급)과 그룹 II(D·E 등급) 등 5개 등급으로 분류됐다.

일반대는 A등급(95점 이상) 34개교, B등급(90점 이상) 56개교, C등급(90점 미만) 36개교, D등급(70점 이상) 26개교, E등급(70점 미만) 6개교로 나타났다. 전문대는 A등급이 14개교, B등급 26개교, C등급 58개교, D등급 27개교, E등급이 7개교로 집계됐다.

이 중 D, E등급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을 통해 강도 높은 구조개혁 대상이다. E등급은 2016년부터 재정지원이 학교체제 유지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전면 차단되고 컨설팅을 통해 평생교육시설로 기능전환이 유도된다.

D등급의 경우 기존 재정지원사업은 지속되지만 신규 사업은 제한된다. D등급 중 80점(전문대는 78점) 이상인 대학은 학자금은 지원받지만 국가장학금 II 유형인 신·편입생에게 제한되고 80점(전문대는 78점) 미만은 일반학자금까지 50% 제한된다.

D·E등급 대학은 컨설팅 이행과 자율적 구조개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평가를 통해 2017년 재정지원이 다시 허용될 수 있다. D등급 중 2016학년도 일반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되는 일반대는 강남대, 경주대, 국동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영동대, 청주대, 호원대, 한영신학대 등 10개교다.

전문대의 경우 김포대, 농협대, 목포과학대, 여주대, 서일대, 성덕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 천안연암대, 충북도립대, 한영대 등 14개교다.

E등급을 받은 대학은 모두 13개교다. 일반대가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등 6개교이고 전문대는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7개교이다.

교육부는 B등급부터 E등급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것을 권고하고 A등급은 자율적 감축을 허용했다. 이번 감축인력(5천439명) 규모까지 포함하면 평가 1주기(2014~2016년)에 4만7천여 명을 줄일 수 있어 당초 감축목표 4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 사교육비 증가 추세 지속

교육부가 통계청과 공동으로 '2014년 사교육비·의식조사'를 실시해 2015년 2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심리의 위축에도 고소득층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에 3천원이 증가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 2년 연속 1인당 사교육비가 늘어난 셈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 1천189개교의 학부모와 학생 7만8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4만2천원으로 2013년(23만9천원)보다 1.1%(3천원) 늘었다. 초등학교는 23만2천원으로 2013년과 동일하지만 중학교는 1.2%(26만7천원→27만원), 고등학교는 2.9%(22만3천원→23만원) 각각 2013년보다 증가했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들로 범위를 좁히면 월평균 지출은 훨씬 많아진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5만3천원이고 고등학교의 경우 46만5천원이나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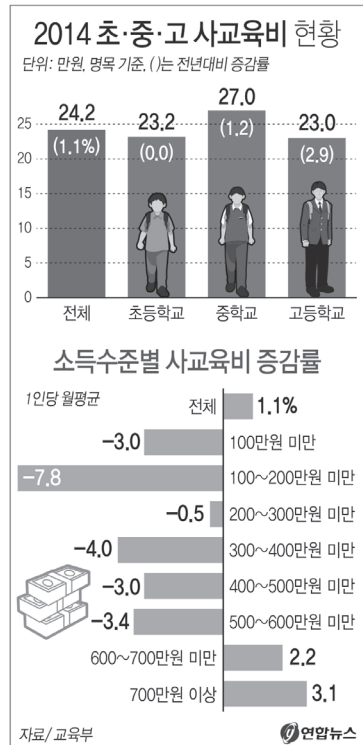
또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을 보면 월평균 소득이 600만원 미만의 가구는 2013년보다 0.5~7.8% 줄었지만 600만~700만원 미만은 2.2%, 700만원 이상은 3.1% 각각 증가했다.

사교육비 금액별 학생 분포를 보면 월 50만원 이상이 2013년 13.3%에서 2014년 14.4%로 1.1%p 상승했다. 이는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이 늘면서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반적인 사교육비 증가에는 예체능 과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의 1인당 사교육비는 2013년 4만7천원에서 2014년 5만원으로 7%p 증가했다.

일반교과 사교육비의 경우 초등학교는 3.5%(15만8천원→15만2천원)로 감소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2%(24만5천원→24만8천원), 2.6%(18만9천원→19만4천원) 증가했다.

일반교과 가운데 국어는 6.2% 감소했고 영어는 0.7%, 수학은 3.3%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중학교는 영어가 2013년 대비 3천원, 수학이 4천원 각각 증가했고 고등학교에서는 수학 사교육비가 5천원 늘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68.6%로 2013년보다 0.2%포인트 떨어져 7년째 감소세를 이어갔고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5.8시간으로 2013년보다 1.5%p 하락했다. 2014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18조 2천억원으로 2013년보다 4천억원(2.0%)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초·중·고 학생 수가 628만6천 명으로 2013년보다 3.0% 감소한 영향이 크다.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74.4%), 경기(72.8%), 대전(70.5%) 등의 순으로 높았고 전남(58.5%)이 가장 낮았다.

유아·초·중등교육

■ 유아교육

유치원 수는 1980년 901개에서 1990년 8천354개로 급증했으나, 2000년 이후에는 계속되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유치원 설립도 주춤해 2000년 8천494개, 2005년 8천275개, 2012년 8천538개, 2013년 8천561개, 2014년 8천826개, 2015년 8천930개 등 비슷한 추이를 유지하고 있다.

유치원 원아 수는 1965년 1만9천566명에서 1970년 2만2천 271명, 1980년 6만6천433명, 1990년 41만4천532명으로 증가했으며 2013년에는 65만9천265명으로 1965년의 34배 가까이 늘었다. 2014년에는 65만2천546명으로 2013년보다 6천719명 줄었고, 2015년에는 68만2천553명으로 다시 늘었다.

원아 수는 2000년 54만5천263명, 2010년 53만8천587명 등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해 있었다.

이는 2012년 누리과정의 5세 과정을 도입한 데 이어 2013년 만 3~4세로 확대됨에 따라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2006년 '쌍춘년', 2007년 '황금돼지' 해를 맞아 결혼과 출산이 증가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초등학교

초등학교 수는 1945년 2천834교에서 1965년 5천125개교, 1985년 6천519개교로 늘었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1990년 6천335개교, 2000년 5천267개교로 줄었다가 2001년 5천322개교, 2005년 5천646개교, 2009년 5천829개교, 2013년 5천913개교, 2014년 5천934개교, 2015년 5천978개교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1965년 494만1천345명에서 2013년에는 278만4천 명으로 줄었다.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70년으로 574만9천301명이었으며 그 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313만2천477명에서 2012년 295만1천995명으로 200만 명대로 떨어졌고 2013년 278만4천 명, 2014년 272만8천509명으로 감소했다. 2015년에도 271만4천610명으로 줄었다.

초등학교 교원 수는 1965년 7만9천164명에서 2011년 18만 625명, 2012년 18만1천435명, 2013년 18만1천585명, 2014년 18

만2천672명으로 늘었다. 2015년에는 18만2천658명으로 약간 줄었다.

성별로는 1965년에는 남자가 5만8천957명, 여자가 2만207명으로 남자 교원이 월등히 많았으나, 1990년에는 남자가 6만 8천196명, 여자 6만8천604명으로 역전되고 2015년에는 여교원이 전체의 76.9%를 차지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2000년 35.8명, 2002년 34.9명, 2004년 32.9명, 2006년 30.9명이었다가 2008년에 29.2명으로 20명대로 접어들었고 2011년 25.5명, 2012년 24.3명, 2013년 23.2명, 2014년 22.8명, 2015년 22.6명으로 계속 줄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01년 28.7명, 2003년 27.9명, 2005년 25.1명, 2007년 22.9명, 2009년 19.8명, 2011년 17.3명, 2012년 16.3명, 2013년 15.3명, 2014년 14.9명, 2015년 14.9명으로 점차 줄고 있다.

■ 중학교

중학교 진학률은 1965년 54.3%에 그쳤으나 1980년 95.8%로 증가했고 1995년 이후에는 99.9%의 진학률을 보이며 현재는 거의 완전 진학에 이르고 있다.

중학교 수는 1965년 1천208개교에서 2012년 3천166개교, 2013년 3천173개교, 2014년 3천186개, 2015년 3천204개로 늘었다.

학생 수는 1965년 76만1천341명에서 1985년 278만2천173명에 이를 때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13년 180만4천189명, 2014년 171만7천911명, 2015년 158만5천951명이 됐다.

중학교 교원 수는 1965년 1만9천67명에서 1995년 9만9천931명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1995년 이후에는 점차 감소했으나 2000년 이후 다시 증가해 2013년 11만2천690명, 2014년 11만3천349명, 2015년 11만1천247명이 됐다.

성별 구성비는 1965년에는 남자 교원이 83.9%였으나 1995년부터 여자 교원이 남자 교원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2015년에는 전체 중학교 교원 가운데 여자 교원이 68.6%를 차지했다.

1965년 60.7명에 달하던 학급당 학생 수는 2000년 38.0명, 2002년 36.7명, 2004년 35.1명, 2008년 34.7명, 2011년 33.0명, 2012년 32.4명, 2013년 31.7명, 2014년 30.5명, 2015년 28.9명으로 꾸준히 줄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65년 39.4명에서 1980년 45.1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00년 20.1명, 2001년 19.6명, 2008년 18.8명, 2011년 17.3명, 2012년 16.3명, 2013년 16명, 2014년 15.2명, 2015년 14.3명이 됐다.

■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는 1965년 389개교에서 계속 증가해 1990년 1천96개교로 1천 개교를 넘어섰으며 2010년 1천561개교로 증가했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1965년 312개교에서 2010년 692개교로 늘었다.

2011년부터는 학교 구분이 다양해졌다. 2015년 기준으로 일